

제5차 연안통합관리 지역역량 강화 워크숍 자료집

일시 : 2013. 9. 11(수) 14:00~17:00

장소 : 대전역 철도공사 본사 대회의실



워크숍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등 록	
14:00~14:10	인사말씀	윤종호 과장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14:10~14:50	발표 1 : 연안의 범위 및 연안용도해역제 질의사항 설명	최지연 전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50~15:30	발표 2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질의사항 설명	정지호 전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30~15:50	휴식	
15:50~16:10	발표 3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추진방향	문미희 사무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16:10~17:00	연안관리 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질의 응답	

목 차

발표자료 1 :

- 연안의 범위 및 연안용도해역제 질의사항 설명 1

발표자료 2 :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질의사항 설명 25

부록 :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관련 질문 및 건의사항 45

〈발표자료 1〉

연안의 범위 및 연안용도해역제 질의사항 설명

최지연 전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의 범위와 연안용도해역제 질의사항 설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 지연

2013. 9. 11(수) 14:00 대전역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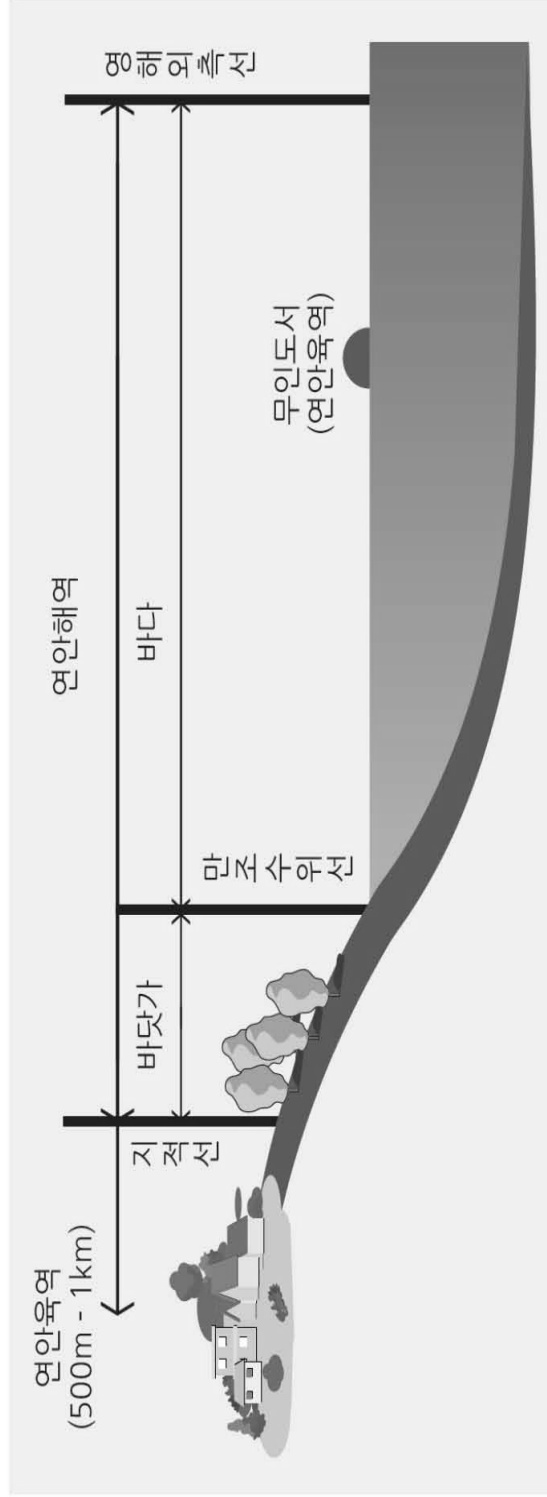
1. 연안의 범위와 계획 대상 연안 범위 설정 관련 사항
2.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설정 관련 사항

연안의 범위

연안의 개념

- 육상환경과 해양환경, 육상활동과 해양활동에 대한 상호영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 연안범위 설정기준: 지형적 기준, 행정관할권, 임의거리 기준, 환경기준 등 (UN, 1980)
- 국가별 특성과 관리목적에 따라 상호보완적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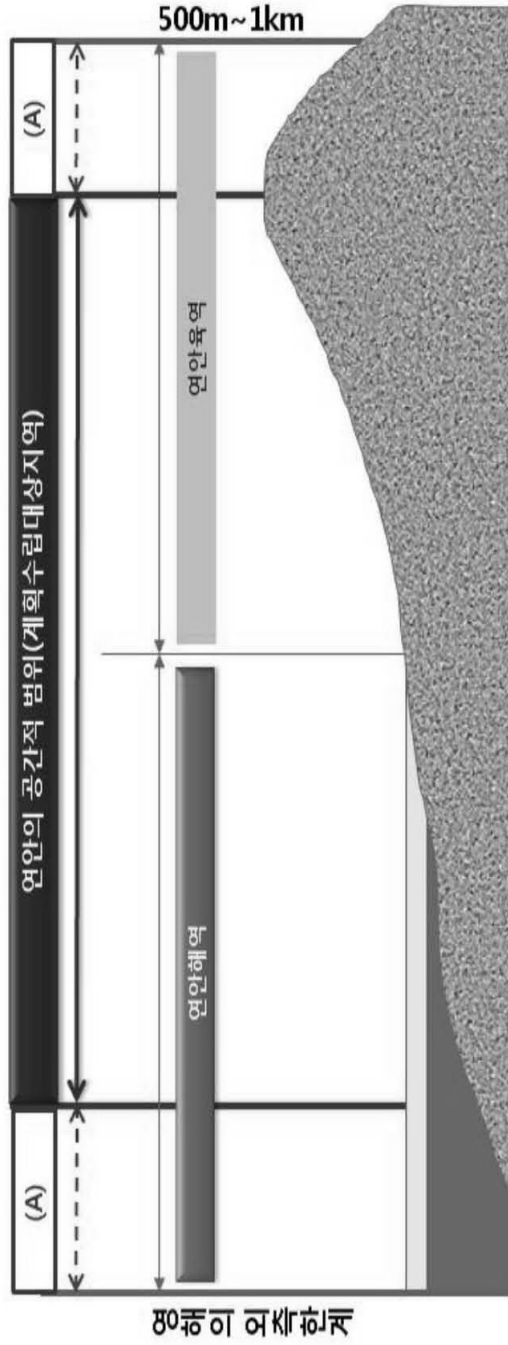
우리나라: 임의거리 기준 채택



계획 수립 대상 연안의 설정

계획 수립 대상 연안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대상 범위 설정



(A) 계획대상 연안의 조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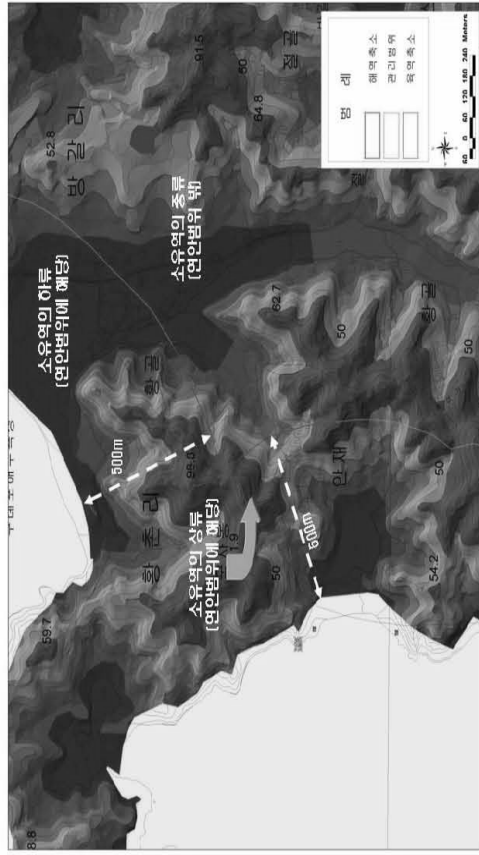
- 행정구역 및 지형
- 다른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 하천의 수계, 조류 및 해저지형
- 연안의 환경 및 경관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수산업, 광업, 관광산업 등 연안해역의 이용 현황
-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확산 범위
- 사회·경제적 활동의 연관성

계획대상 연안에
포함되지 않는 각 지역에 대해
서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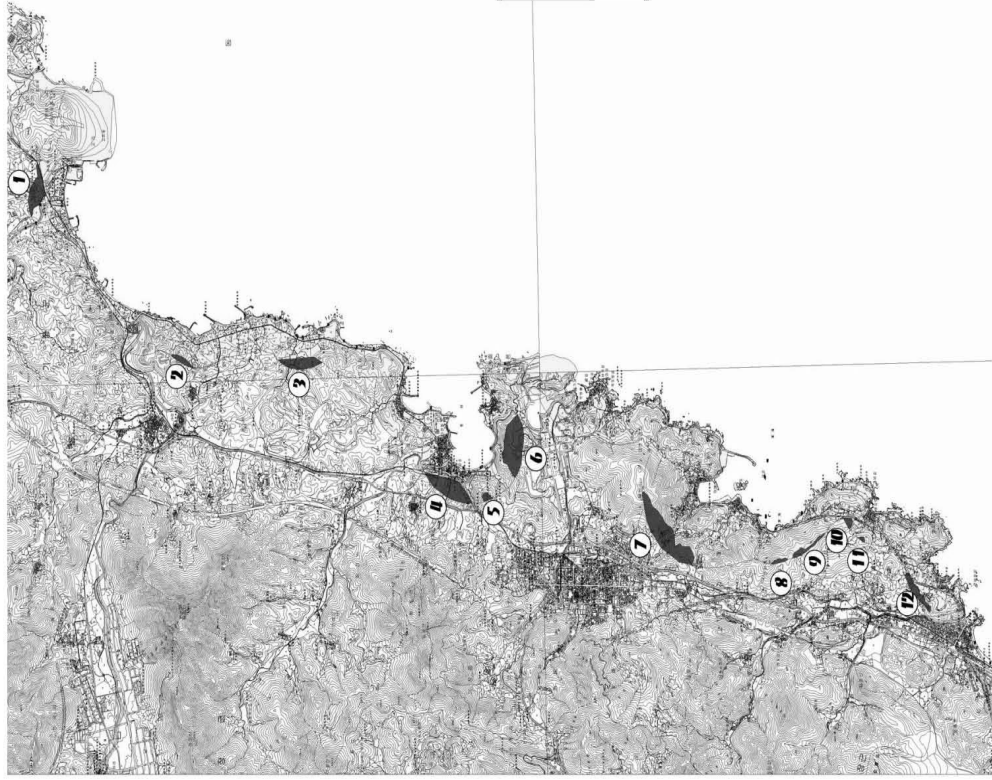
계획 수립 대상 연안의 설정

조정기준(예시)

조정기준 (예시)		조 건
유형 1	- 산악 및 구릉이 발달한 연안지역에서 법정 연안범위에는 포함되지만 내륙지역으로 향하는 경사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연안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관리범위에서 제외	
유형 2	- 도로는 연안지역에서는 해안선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연안지역과 비연안지역을 구분하는 경계	
유형 3	- 대규모 간척 또는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신규 토지등락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	



계획 수립 대상 연안의 설정



[연안육역 범위 조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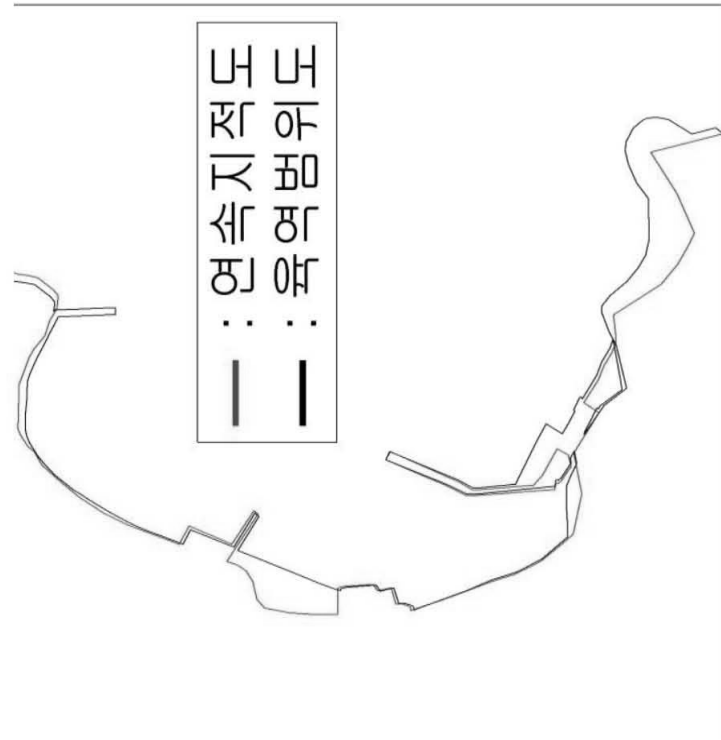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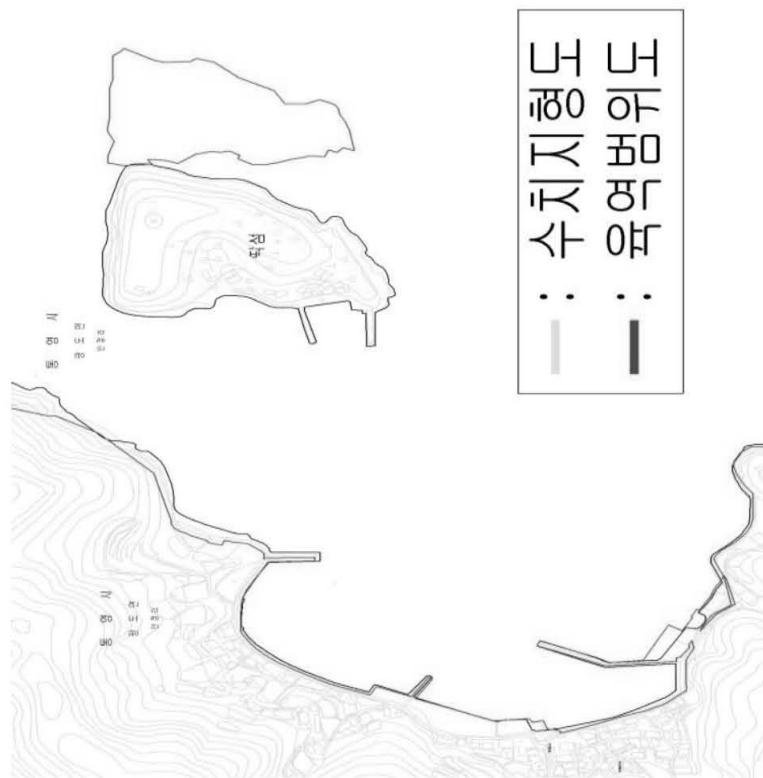
번호	위치(읍면동)	면적(m ²)	조정사유
1	○○읍(동)	120,966	
2	○○면(동)	29,379	
3	○○면(동)	102,549	
...	
합 계		1,178,081	

구분	연안육역의 범위	축소 조정면적	계획수립대상 연안 육역의 범위
육역	16.44 km ²	1.18 km ²	15.26 km ²

계획 수립 대상 연안 관련 Q&A

[주요질문]

- 연안육역선 (지적선)과 수치지형도 간 불부합되는 부문은 어느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가? (보령시)
- 현재 수치지형도와 KMI 및 해양수산부 의 자료 수령 후 중첩해 본 결과 자연해안선과 지적선 및 육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문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문 중 어느 부분을 조사하여 용도를 부여하는지 (태안군)
- KMI에서 제공하는 연안의 육역범위를 기준으로 설정시, 지자체에서 보유중인 수치지형도 및 연속 지적도와 많은 부문이 상이한 바, 도면작성 기준 제시 필요 (사천시)
- KMI에서 제공하는 연안의 육역 범위와 하동군에서 보유 중인 수치지형도 및 연속지적도의 도면이 불일치하여 도면작성의 기준이 모호함 (하동군)
-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관련 근거도면은 3개로 연안육역범위도,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가 있으나 3개가 상이한 바에 대한 도면작성 기준이 되는 도면은? (통영시)



계획 수립 대상 연안 관련 Q&A

연안육역의 범위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구역 제외)으로서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연안해역의 범위

가. 바닷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바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계획 수립 대상 연안 관련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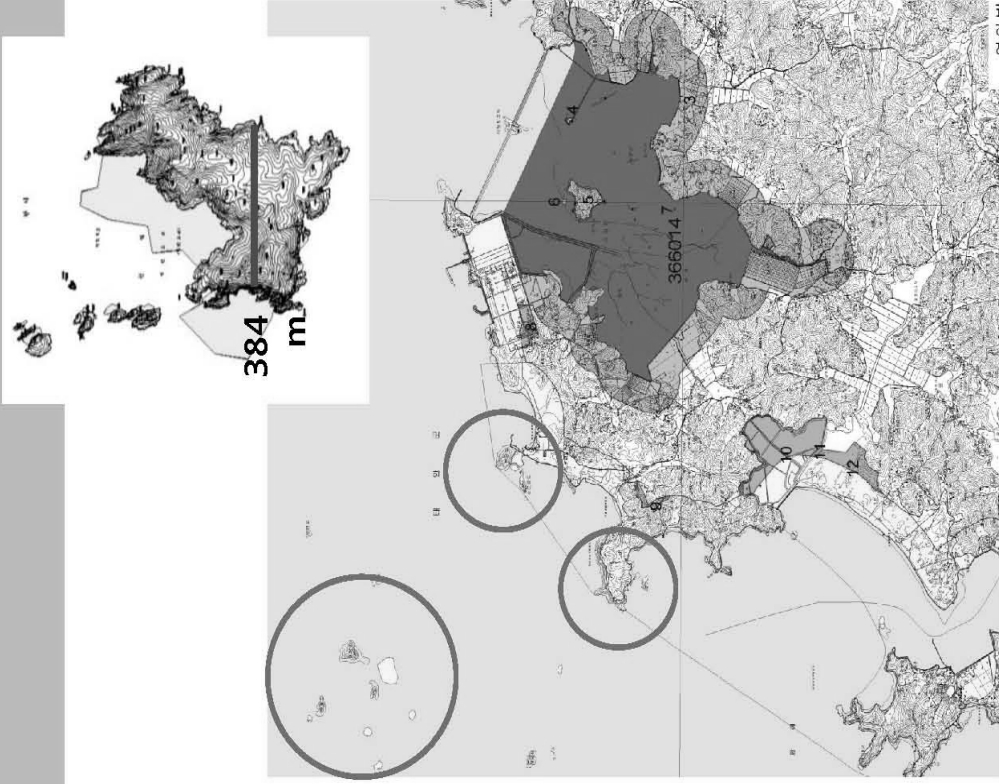
- 연안 육역 :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최시의
'연속지적도' 상에서 나타난 외측 경계선

1) KMI에서 제공한 연안육역의 범위,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와 불일치 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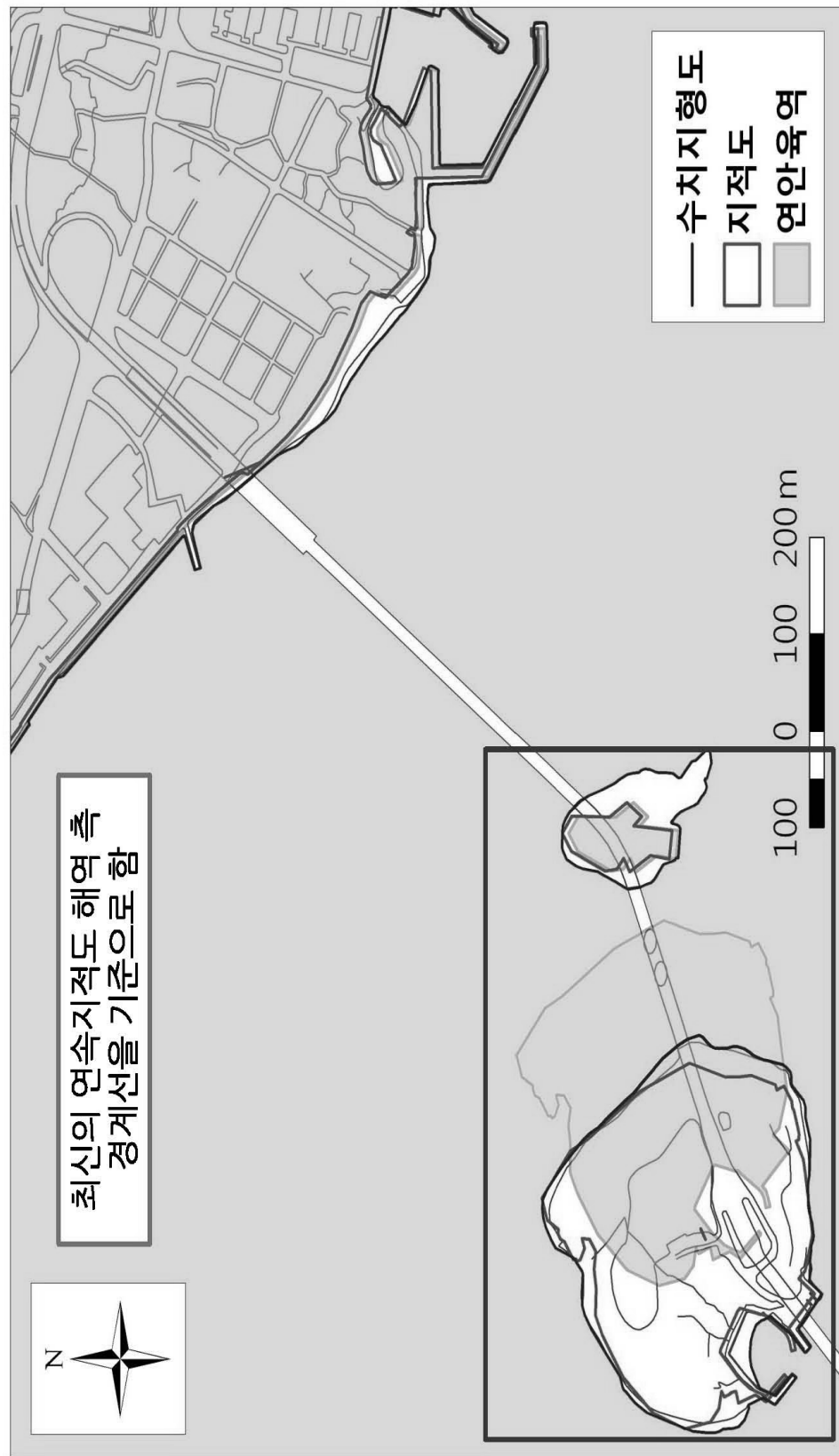
→ 최시의 '연속 지적도'에서 나타난 해역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육역 범위 설정

2) 도서지역의 경우, 수치지형도와 연속지적도와 불일치할 경우

→ 수치지형도와 연속지적도 상의 도서지역을 그대로 표시



계획 수립 대상 연안 관련 Q&A



계획 수립 대상 연안 관련 Q&A

[주요질문]

- 연안해역범위 설정 시 타 시·군과의 경계 및 직선기선, 영해까지 범위 설정 시 중복 우려 (보령시)
- 해역의 행정경계 기준 문제, 지역계획 고시시 효력
- 현행법상 해상에는 지자체간 경계선이 없는 상태로 관할 해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부안군)
- 해역은 육지부처럼 고시된 경계가 없어 임의대로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시 인근 지자체와 해상경계부분에 대한 마찰이 예상되고 지자체 해역경계부분에 대한 용도해역과 기능구 설정이 동일한 여건 인데도 지정의제가 상이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계획 수립 시 해상경계기준과 지정의제 상이부분에 대한 대책? (통영시)

계획 수립 대상 연안 관련 Q&A

연안해역의 범위 설정

연안관리지역계획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

- 7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
- 행정구역도, 지형도 등 참조
-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공청회)

- 지역계획의 연안해역 범위는 지역계획 수립권자가 판단하는 ‘관할 연안’의 범위임
→ 해상경계와 무관

- 인근 지자체 간 해역부문이 각기 다른 용도해역 혹은 기능구로 지정될 경우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통해 조정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연안용도해역	기준	연안해역기능구
이용연안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 혹은 예상되는 해역 - 해양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발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광물자원구, 해중문화시설구
특수연안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질관리구, 해양조사구, 재해관리구, 군사시설구, 산업시설구, 해양환경복원구
보전연안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어장구, 해양문화자원보호구
관리연안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해역 중 이용·특수·보전연안해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해역 - 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에 해당하는 기능구 중첩 지정·변경 (2014. 8. 14 시행)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주요질문]

1. 연안기반시설인 산업단지 지역에 대하여 용도해역 지정에 따른 기능구 미설정으로 용역추진 애로
(경남 창원시, 사천시, 고성군)
 - 사천시와 고성군: 산업단지 등 일부 연안기반시설의 경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 기능구를 설정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기능구 또는 지정의제 없음.
 - 창원시: 산업단지의 연안용도해역 기능구 설정에 따른 명확한 지침 불분명
 - 통영시: 인근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시설물 (산업단지, 여객터미널 등)은 기능구 및 지정의제가 없음. 계획 수립의 모호함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기능구 지정계획이 있는지 지정시 기능구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산업단지: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중 해당 기능구
 - * 여객선 터미널: 레저관광구, 항만구, 어항구, 항로구 중 해당기능구는 아니면 또 다른 기능구 설정이 있는지
2. 기능구 지정에 관해 패류생산지정해역의 경우, 지정의제가 모호하여 계획수립자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어장구’, ‘해양환경복원구’ 등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지정의제가 결정되지 않는 기능구의 지정방법 제시? (사천시와 통영시)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주요질문]

3. 연안용도해역 도면 표시 중 관리연안해역 경우, 연안해역 기능구를 설정해야 하나 둘 이상 기능구에 해당되어 용도구분이 곤란한 해역의 경우 우선순위에 의하여 기능구를 설정하면 되는지 여부 (예, 어항구와 해수욕장 구 중 우선순위가 어항구일 경우, 어항구로 표시하면 되는지 여부) (통영시)
4. 관리연안해역(연안용도해역 미지정 및 중복해역)에 대한 해역적성평가 실시 여부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령시)
5. 각 기능구에 대한 구역 설정 시 범위 설정에 어려움. 각 기능구에 대한 지정기준 시 구체적인 구역설정 기준 필요 (태안군)
6. 어항구(이용연안), 어장구(보전연안) 등 비슷한 성격이거나 관련이 있는 기능구들이 다른 용도해역의 카테고리 포함되어 있어 해역관리방안의 연계성이 떨어짐 (통영시)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1. 산업단지 지역에 대하여 용도해역 지정에 따른 기능구 미설정으로 용역추진 애로

- 법 제2조: 연안육역 설정 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km 설정
- 법 제17조(지정의제): 산업단지 → 이용연안해역
- 연안관리의 세부추진사항에 명시 →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부문의 세부 추진사항으로 제시

2. 패류생산지정해역의 지정기준? : 계획수립자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어장구’, ‘해양환경복원구’ 등

- 패류생산지정해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정해역’) : ‘면허어업권’ 분포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 등 지정 확인
 - 면허어업권 분포 → 어장구 지정 가능
 -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수산자원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지정 가능
 - 중복 지정 가능 : 어장구 및 수산생물자원보호구역 중복 지정 가능
- * 계획수립자의 주관적 해석 가능. 단,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3. 관리연안해역에 대한 도면 표시,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기능구를 표시해야 하는가?

예) 어항구와 해수욕장구 중 우선순위가 어항구 일 경우, 어항구로 표시해야 하는가?

- 2014. 8. 14 이전 : 관리연안해역에는 '기능구'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구 표시 필요 없음.
- 2014. 8. 14 이후 : 관리연안해역에 '기능구' 중복 지정 가능 → 해당 기능구 표시

4. 관리연안해역(연안용도해역 미지정 및 중복해역)에 대한 해역적성평가 실시 여부와 방법

- 2014. 8. 14 이전 : 해양수산부장관 실시.
- 2014. 8. 14 이후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별표 9: 연안해역적성평가 지침〉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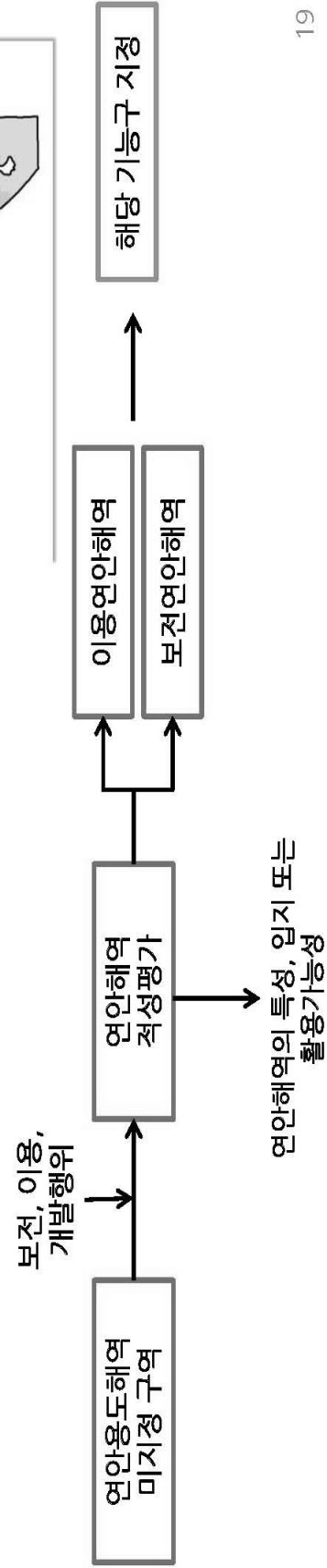
4. 관리연안해역(연안용도해역 미지정 및 중복해역)에 대한 해역적성평가 실시 여부와 방법

■ 연안용도해역의 중복해역

해당 해역의 자연환경 특성, 이용·개발 현황 및 장래의 보전·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방향에 따라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함.

→ 단,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해역적성평가를 거침

■ 연안용도해역의 미지정 해역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5. 기능구 설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6. 어항구(이용연안), 어장구(보전연안) 등 비슷한 성격이거나 관련이 있는 기능구들이 다른 용도해역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어 해역관리방안의 연계성이 떨어짐

<연안용도해역 제도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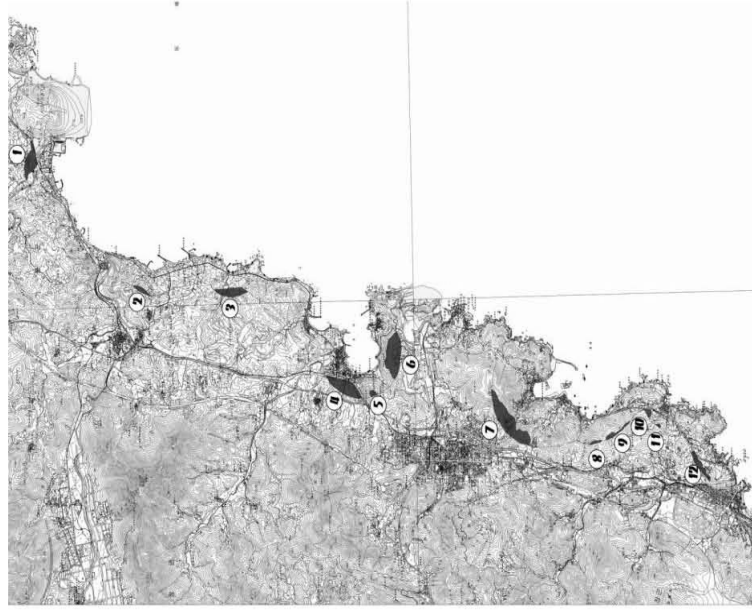
- 유사하거나 모호한 연안해역기능구의 조정 필요
- 공통적으로 지정 가능한 기능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능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기타사항>

- 연안관리지역계획 조사 작성<별표 3> 조사종류 중 연안육역 결정조사서 서식

연안육역	면적 (㎡ / km)	비고 (축소조정사유)
관할 범위		
축소조정 면적		
계획수립 대상의 범위		
① ○○동(동)		
② ○○면(동)		
③		
④		
⑤		
...		
...		
축소조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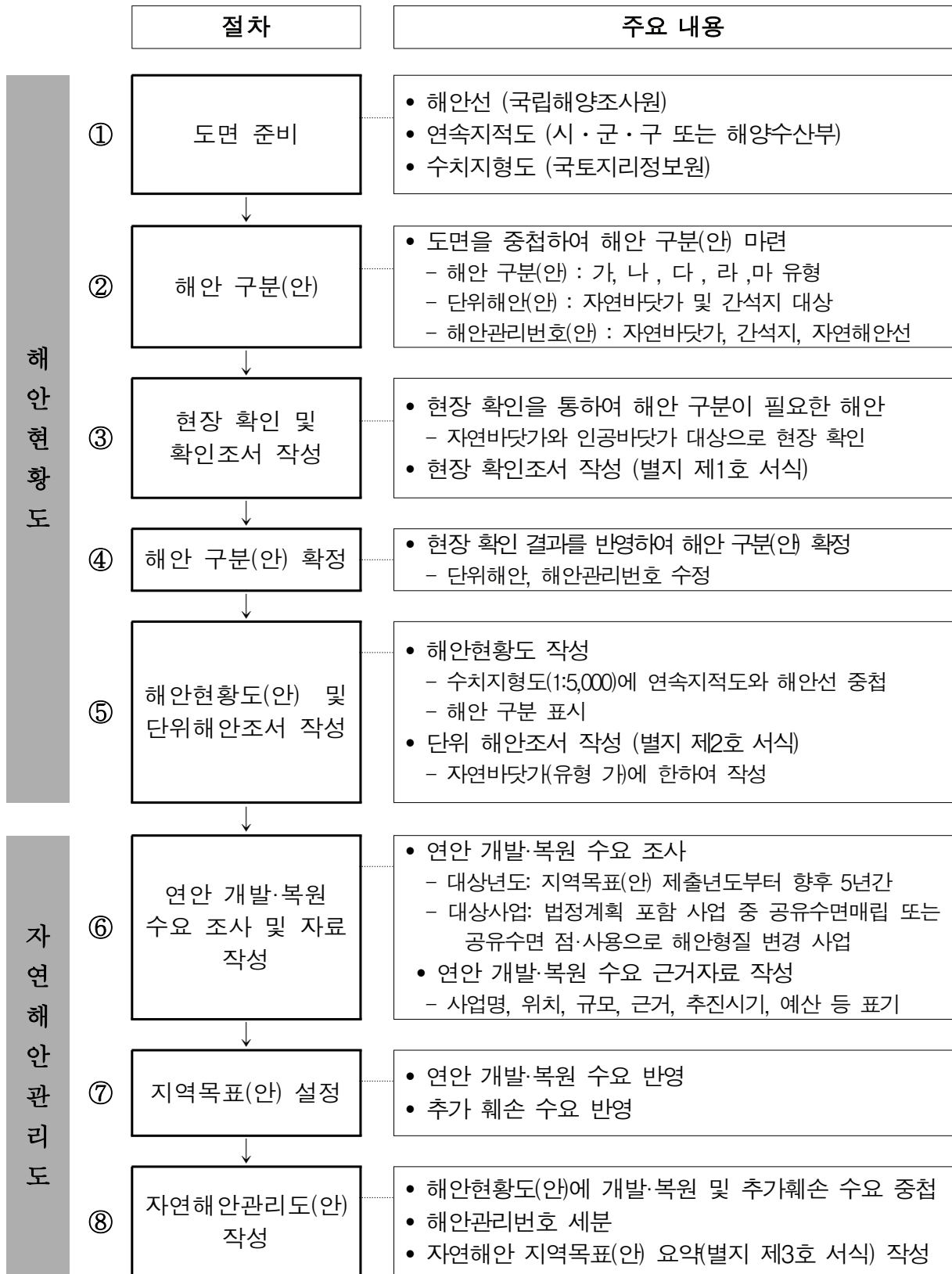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Q & A

〈발표자료 2〉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질의사항 설명

정지호 전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절차



자연해안관리목표제

Q & A

① 도면준비

질문: 해양조사협회에서 제공한 도면(해안현황도, 자연해안관리도 초안)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 지자체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가능한 최근의 자료이거나 실제 현황에 맞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해양조사협회에서 제공한 도면은 2011년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일부 지역이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면(연속지적도 등) 또는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 실제 현황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립해양조사원에서 2012년 말 기준으로 작성한 해안선 자료, 둘째, 개별 지자체(지적 혹은 도시 관련 부서)가 작성한 현재 시점의 연속지적도, 셋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가장 최신의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2012년 말 기준 해안선 자료는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에 공문을 통하여 요청하면 연안관리지역계획TF(KMI 운영)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새로운 해안선 및 연속지적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양조사협회에서 제공한 해안현황도를 수정하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직접 해안현황도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임

① 도면준비

질문: 해안현황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3개 도면(해안선, 연속지적도, 수치지형도)을 중첩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3개 도면을 중첩하는 기준점은 세계측지계입니다. 3개 도면 중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는 세계측지계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해안선과 연속지적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야 합니다.

구분	한국측지계	세계측지계
타원체	Bessel184 회전타원체	GRS1980 회전타원체
데이터	Korean 1985 데이터 (Tokyo D 데이터)	ITRF 2000 데이터
투영법	TM (Transverse Mercator)	TM (Transverse Mercator)
투영원점	서부원점: 경도+125° 위도 38° 중부원점: 경도+127° 위도 38° 동부원점: 경도+129° 위도 38° 동해원점: 경도+131° 위도 38°	서부원점: 경도+125° 위도 38° 중부원점: 경도+127° 위도 38° 동부원점: 경도+129° 위도 38° 동해원점: 경도+131° 위도 38°
투영원점 가산값	False Easting: 200,000 m False Northing: 500,000 m (단, 제주도의 False Northing은 550,000 m)	False Easting: 200,000 m False Northing: 600,000 m
중앙자오선의 축척계수	1.0000	1.0000

■ 도면별 기준 좌표계

- 연속지적도 : 한국측지계
- 수치지형도 : 세계측지계 (GRS80)
- 해안선 : 세계측지계 (WGS84)

■ 좌표변환 방법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보급하는 '수치지도활용 소프트웨어(NGIMap 1.0)'을 이용하여 표변
- 타 프로그램 사용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① 도면준비

질문: 연속지적도와 수치지형도를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변환해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엇이 기준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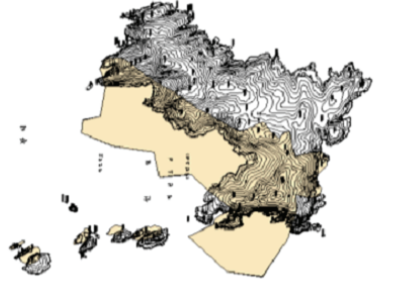
○ 수치지형도와 연속지적도가 맞지 않을 경우(주로 도서지역)에
는 지형도 혹은 지적도를 현실에 맞게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
여 수정하지 않는 한, 지역계획 수립 시 임의로 위치를 이
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도면을 변형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 도면상에는 수치지형도와 연속지적도가 불일치하게 표시되
지만 자연해안관리목표에서는 해안선과 연속지적도를 이용한
단위해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수치지형도는 해안의 상태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정사영
상,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보완이 가능함

○ 다만 자연해안관리목표는 현재 육지만을 대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당장 위치 오류에 대한 문제가 적을 수 있으나 향후
도서지역에 대한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이른 시기에 기초 도면(연속지적도, 수치
지형도 등)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보령시 측도 임원



① 도면준비

질문: 해양조사협회에서 제공한 해안현황도에 해안정보 속성값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해안유형 구분, 해안관리번호 등과 해안정보 속성값은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표5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 해안정보 속성값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해안유형 구분의 오류인지 해안관리번호의 오류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질문: 해안선과 연속지적도 변경으로 간석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해양조사협회에서 제공한 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관리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새롭게 해안현황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간석지(폴리곤 형태)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 새로운 해안선과 연속지적도에 맞게 간석지를 변경하려면 기존 간석지와 새로운 해안선 및 연속지적도를 병합하여 수정된 간석지를 추출해야 합니다.

② 해안 구분(안)

질문: 단위해안은 무엇이며 해안관리번호 부여 방식 무엇입니까?

- 단위해안은 “자연해안선과 지적선 또는 간조수위선으로 폐합되어 주변 해안과 독립되어 만들어진 자연바닷가와 간석지”를 말합니다. 즉 단위해안은 자연바닷가(유형 가)와 간석지(유형 마)를 말합니다.
- 단위해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안 형상 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안을 폴리곤의 형태로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해안이 폴리곤의 형태로 구분이 되면 5가지 해안의 유형(자연바닷가, 인공바닷가,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간석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 자연바닷가와 간석지가 단위해안이 됩니다.
- 단, 자연바닷가 또는 간석지가 면적이 1㎡미만이거나 폭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단위해안에서 제외합니다.
 - ※ 지자체에서 직접 해안을 형상, 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해양조사협회에서 제공한 해안현황도에서 구분한 위치를 참조
- 해안관리번호는 원칙적으로 개별 단위해안(자연바닷가와 간석지)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하지만 자연바닷가, 자연해안선, 간석지를 자연해안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자연해안 관리의 실효성 측면에서 자연해안선에도 해안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 해안관리번호 부여방식은 ‘가-1’과 같이 해안유형(가, 다, 마)과 단위해안번호를 연속하여 표시합니다. 만약 해안의 이용·개발수요로 단위해안이 세분되면 ‘가-1’, ‘가-1-1’, ‘가-1-2’와 같이 부번을 추가합니다.
- 부번 추가기준은 이용·개발 수요로 세분되기 전부터 단위해안이었던 지역은 원래 번호 ‘가-1’를 부여하고, 이용·개발이 계획된 단위해안에 대해서 북(北)→남(南), 서(西)→동(東)의 순의 기준으로 부번을 부여함

■ 참고자료 : 단위해안 제외 설정기준

-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제2011-971호) 중 자연바닷가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3가지 형태가 나타남.
 - 제8조 제8항 : 기호 및 주기를 표기할 경우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현상 부득이한 경우 지도상 $\pm 0.2\text{mm}$ 이내의 오차를 허용한다(도상 $0.2\text{mm} = \text{실제 } 1,000\text{mm}$).
 - 제17조 제2항 제1호 : 호수와 못은 지도상 면적이 2.0mm^2 이상의 것을 표시하며, 수심 및 수면의 표고는 표시하지 않는다(도상 $2.0\text{mm}^2 = \text{실제 } 50\text{m}^2 = 7,071\text{mm} \times 7,071\text{mm}$).
 - 제30조 제2항 제1호 나목 : 제방은 그 실제 모습을 도로의 성토 및 절토부의 규정을 준용해 표시한다. 다만, 사면의 실제 모습의 폭이 지도상 0.5mm 미만인 경우 실제 형태로 표시하기 곤란한 작은 제방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도상 $0.5\text{mm} = \text{실제 } 2,500\text{mm}$).
- 최종 선택 기준은 규정 제8호 제8항의 지도상 허용오차로 선택함.
- 적용기준 : 면적이 1m^2 미만이거나 최대폭이 1m 미만인 단위해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③ 현장 확인 및 확인조서 작성

질문: 현장확인 대상 해안은 어느 곳이며 현장 확인조서는 언제 작성합니까?

- 현장 확인은 개념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하여 도면분석으로 도출한 결과를 수정·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도면분석을 통하여 자연바닷가로 구분된 해안의 자연 또는 인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안선과 간석지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지역계획 수립 시 임의로 수정이 불가하여 현장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면분석 시 인공바닷가였으나 실제로 자연바닷가인 경우가 있으며 이는 해안선 자료의 시점과 자연바닷가로 전환된 시점의 차이로 발생한 문제임. 인공바닷가의 자연바닷가로 전환은 향후 해안선 자료의 업데이트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현장 확인조서는 도면분석을 통하여 자연바닷가로 구분되었으나 현장확인을 통하여 인공바닷가로 전환된 해안만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현장 확인조서는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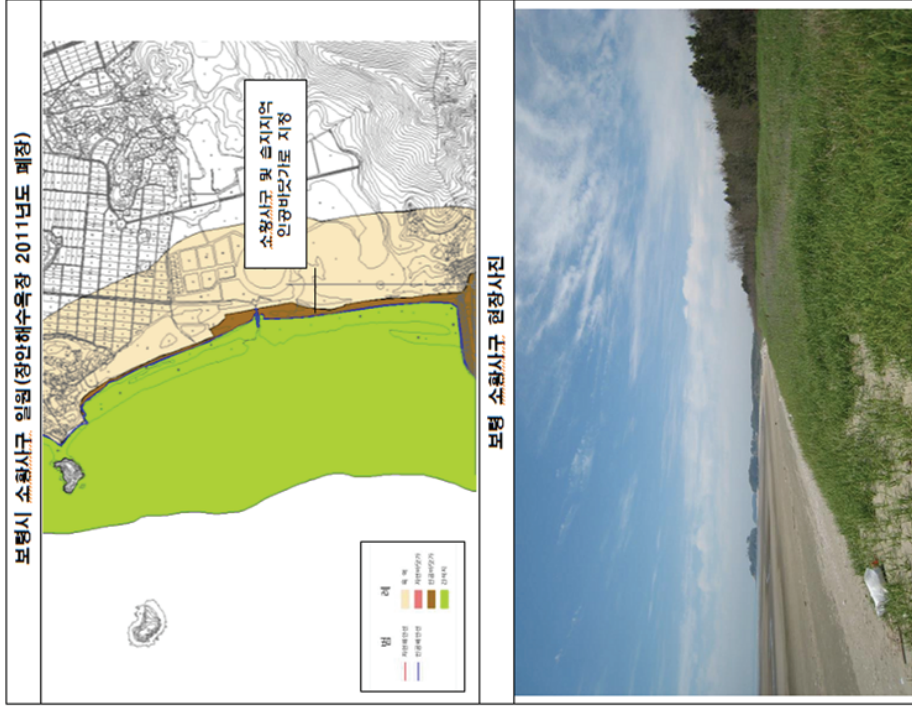
③ 현장 확인 및 확인조서 작성

질문: 해안조사협회에서 제공한 해안현황도 상 해안유형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무엇이 기준입니까?

○ 해안조사협회에서 제공한 해안현황도는 2011년에 발표한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0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현재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2년 말 기준 해안선, 지자체 보유 연속지적도, 최신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새롭게 해안현황도를 작성할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부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새롭게 해안현황도를 작성해도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첫째, 자연바닷가가 인공바닷가로 전환된 경우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수정하고 둘째, 인공바닷가가 자연바닷가로 전환된 경우에는 현지 절에서는 수정하지 않고 향후 해안선 업데이트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③ 현장 확인 및 확인조서 작성

질문: 실제로 바닷가가 있으나 해안현황도에서 자연바닷가 혹은 인공바닷가로 구분되지 않고 누락된 해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누락된 해안(바닷가)은 지자체 단위 자연해안관리목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연해안관리목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안현황도에 누락된 해안의 자연바닷가 혹은 인공바닷가 여부를 분석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해안조사협회에서 제공한 해안현황도에서는 축척 1:5,000 기준으로 1cm(실거리 50m) 미만의 단위해안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일부 해안이 자연바닷가 혹은 인공바닷가로 구분되지 않고 누락되었음

○ 2012년 말 기준 해안선, 지자체 보유 연속지적도, 최신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새롭게 해안현황도를 작성할 경우에는 누락된 해안이 포함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 죽도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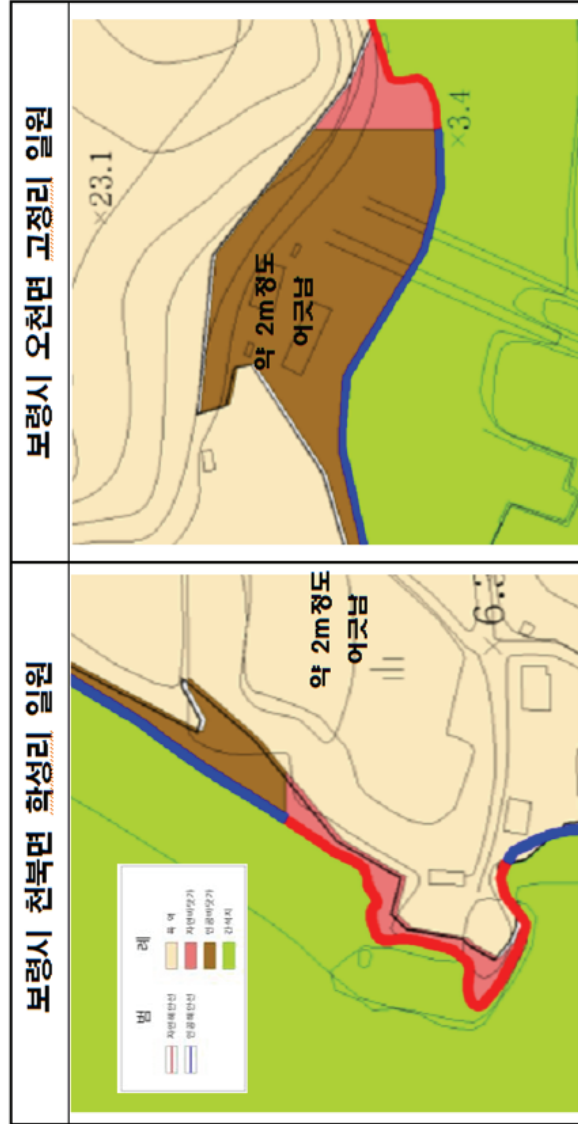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일원



③ 현장 확인 및 확인조서 작성

질문: 해양조사협회에서 제공한 해안현황도 상 바닷가(폴리곤 형태)와 연안육역선이 불일치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2012년 말 기준 해안선, 지자체 보유 연속지적도, 최신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를 기준으로 새롭게 해안현황도를 작성할 경우에는 바닷가와 연안육역선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해양조사협회에서 제공한 해안현황도에서 발견되는 바닷가와 연안육역선의 불일치는 연속지적도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화하는 과정의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였고 대략 2~3m의 오차를 나타남



⑤ 해안현황도(안) 및 단위해안조서 작성

질문: 단위해안조서는 모든 단위해안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까?

- 단위해안은 자연바닷가와 간석지를 말하지만 단위해안조서는 자연바닷가만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단위해안조서는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간석지는 바닷가와 달리 토지의 특성이 적고 지적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바닷가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위해안조서를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⑥ 연안 개발·복원 수요 반영

질문 : 자연해안관리도에 반영할 연안 개발·복원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연안 개발·복원 사업이란 각종 법률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서 자연해안이 포함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개발사업 중에서도 공유수면매립을 수반하거나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해안의 형질이 자연에서 인공으로 변경시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시 '공유수면매립계획', '항만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을 반영하였으므로 지자체에서는 이를 제외한 연안정비계획, 관광개발계획 등을 추가 훼손규모 내에서 반영할 수 있음

○ 복원 수요는 인공해안을 자연해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역간척, 인공호안의 자연호안 전환 등이 해당합니다.

질문 : 자연해안관리도에 중첩할 연안 개발·복원사업 수요의 기준년도는 언제입니까?

○ 자연해안관리도에 반영할 수 있는 연안 개발 및 복원사업은 관할 연안의 지역목표(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5년내에 추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2013년에 지역목표(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다면 향후 5년은 2013~2018년이 됩니다.

○ 연안 개발 및 복원 수요를 자연해안관리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연안의 지역목표(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시점으로부터 향후 5년 이내에 시작하는 사업으로 법정계획에 구체적인 공간범위가 확정되어 있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⑦ 지역목표(안) 설정

질문 : 추가 수요로 인한 지역 자연해안 훼손 규모(추가 훼손규모)는 무엇입니까?

- 추가 훼손규모는 개념적으로 법정계획에 의한 지역 자연해안 훼손 규모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불가피하게 향후 5년 이내에 자연해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규모를 말합니다.
- 추가 훼손규모는 첫째,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2011년) 시에 반영한 법정계획(공유수면매립계획, 항만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 이외의 법정계획을 추가하거나, 둘째, 이미 반영한 법정계획에서 사업의 공간범위가 확장되었거나 변경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예를 들면, 연안정비계획을 통한 연안정비사업, 어항개발계획 상 특정 어항의 시설계획이 확정된 경우 등 해당

기타

질문: 해안선 자료가 없는 도서지역의 자연해안관리목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현재는 도서지역 해안선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육지만을 대상으로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도서지역은 국립해양조사원이 해안선 측량을 완료(2014년 예상)하면 이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 신안군, 통영시 등 도서지역에 해안선의 대부분이 분포하는 지자체도 해안선 자료 구축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상황에서 육지만을 대상으로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함

질문: 해안선 대부분이 도서지역에 분포하는 지자체에게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시 불이익은 없습니까

-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절차와 방법은 해안선의 도서지역 분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지자체의 자연해안 비율 및 개발사업 비율이 고려되는 추가 훼손규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육지와 도서지역 전체를 고려하면 어느 지자체에도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 추가 훼손규모는 지자체의 자연해안 분포 정도와 개발사업 분포 정도가 5:5의 비율로 고려되어 자연해안이 도서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대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자연해안 분포 비율만큼 이익을 받게 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균등한 기준을 적용받음

기타

질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치지형도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지자체에서 공문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수치지형도 제공을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록 1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관련 질문 및 건의사항

인천광역시

구 분	내 용
수립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제1차 지역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1년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변경)으로 지자체 예산 확보 어려움 - 강화군 낮은 재정자립도 등 자체예산 어려움으로 인한 2013년 사업비 미확보로 2014년 본예산 확보 추진 - 강화군은 접경지역으로 각종 법령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문화재) 등] 적용을 받아 2중3중 규제로 지역주민 민원 예상

울산광역시

구 분	내 용
수립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 관내 연안지역은 전지역이 항만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지정)의 국가관리무역항(울산항)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토록 되어 있고 예산 반영이 불투명 - 연안관리법상 지역계획수립 주체 : 관할 연안 기초자치단체 - 제2차 연안통합계획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주체 이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수립 주체 : 광역자치단체 · 연안용도해역지정·자연해안관리목표설정 수립주체 : 기초자치단체
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지역수립시에도 울산 남구는 무역항(국가관리무역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것으로 2차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

■ 경기도

구 분	내 용
수립상 문제점	<p><안산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범위인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수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군·구 단위 연해안관리목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13. 5월 용역 중지한 상태임 - 해안선 통계 오차 (‘12년 조사와 과거 조사된 통계 오차)로 인하여 용역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p><시흥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갯골지역(습지보호지역, 방산동) 인근 주민의 계획수립 반대 <p><화성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범위인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수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군·구 단위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13. 4월 용역 중지한 상태임 <p><김포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예정(‘11. 6월)에 맞춰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해양수산부 연안관리통합계획(‘11.10.27) 및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 수립(‘11.11월)이 늦어져 변경된 사항을 용역내용에 반영하지 못하고 용역기간이 만료됨. - 김포시에서는 변경사항 반영 등을 위한 결과물 수정을 용역사에 요청 하였으나 용역사의 재추진 거부로 인하여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충청남도 보령시

구 분	내 용
질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법에서 연안육역의 범위를 거리기준인 500m 혹은 1km 이내(「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 육지지역으로 정해 있지만, 이외의 지역(대천항 북쪽 20km)에 대해서 1km 이내 범위로 설정한 사유는? - 도서지역에 대한 해안선 미측량으로 인한 해안현황도 및 해안관리도 미비에 대한 대책? - 2014년까지 측량 완료 예정 - 연안육역선(지적선)과 수치지형도 간의 불부합되는 부분은 어느 기준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 (첨부1. 참조) - 연안용도해역 미지정 및 중복해역(관리연안해역)에 대한 해역 적성평가 실시 여부와 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 4차워크숍 자료 33p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되었더라도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분류(인공해안선, 자연해안선)를 수정·변경 없이 이용하라고 했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제공 한 자연해안선 구분이 현지 조사 결과와 다른 경우 자연해안의 구분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름이라고 명시 - 해안선 현황은 국가통계와 일치하도록 작성되므로 수정·변경이 불가하다면 현장조사로 바닷가 구분 시 해안선과 바닷가의 구분이 상이 할 경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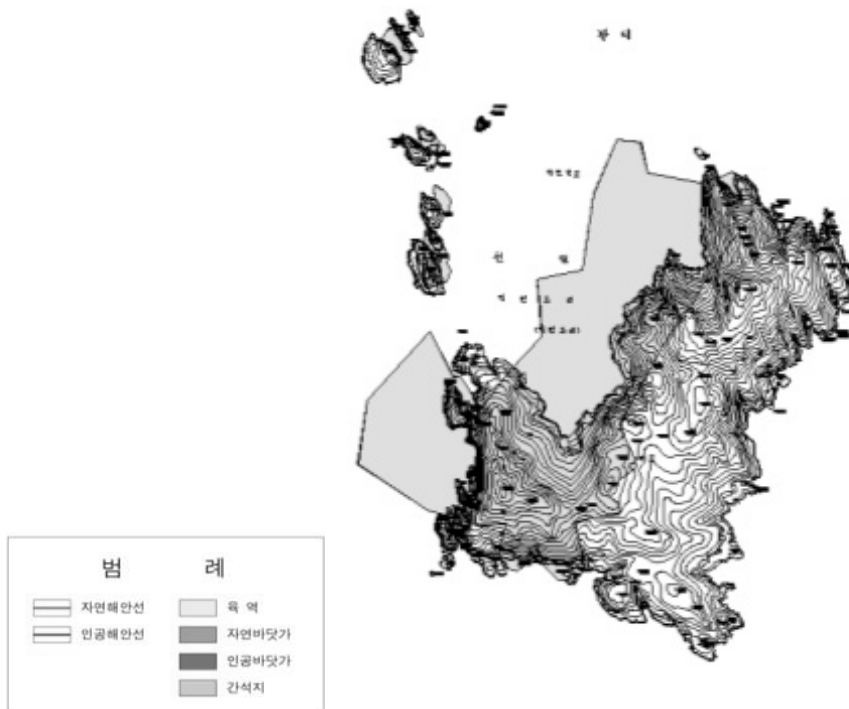
■ 충청남도 보령시 (계속)

구 분	내 용
질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확인 및 조서작성 시 4차워크숍 자료 43p 단위해안조서 작성 해안관리번호 표기와 업무처리규정에서 제시한 해안관리번호 표기방법이 상이함 - 해안 구분을 위해 해당 해안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결과 자연바닷가이나 인공바닷가로 표기 된 곳에 대한 판단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 소항사구(자연바닷가이나 해안현황도에는 인공바닷가로 구분) (첨부2. 참조) - 연안관리지역계획 조서 작성 시(업무처리규정 별표3) 조서종류 중 연안육역결정(변경)조서로 구분되어 있으나, 조서서식이 없음 -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시 최초로 결정하는지 또는 변경으로 결정하는지 결정여부와 만약 변경으로 결정한다면 기정에 대한 기준은? -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따른 지역목표 설정 시 관할 연안 지역목표(안)의 지정년도를 기준년도로 하고, 기준년도로부터 향후 5년간의 추가적인 개발 및 복원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목표(안)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법정계획 수요조사 기간 (국가목표 설정 2010. 03임) - 개발예정수요 규모 산정 시 2014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2010년~2013년) 대한 개발사업은 어떻게 반영을 해야되는지? - 좌표변환 시 투영원점 가산값 (20만, 50만 or 20만 60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의 연안육역선 자료 좌표값은(20만, 50만) - 연안육역선을 기준으로 (연속지적도, 수치지형도, 해안정보 등) 좌표변환 또는 20만, 60만으로 좌표변환 후 작업 여부

구 분	내 용
<p>질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정보 속성(shp)값 중 관리번호 지정 값 오류 - ex) 자연바닷가(가)이나 (다)(나)(라)로 들어가 있음 -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와 KMI에서 받은 자료의 상이 - 바닷가와 연안육역선의 차이 (첨부3. 참조)
<p>건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시·군과의 경계설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해역범위 설정 시 타 시군(서천, 홍성, 태안)과의 경계 및 직선기선, 영해까지의 범위 설정 시 중복 우려 ⇒ 해양수산부에서 타 시·군과의 명확한 경계 설정을 통한 중복경계에 따른 비효율성 제고 - 각 기능구에 대한 구역 설정 시 범위 설정에 어려움 - 각 기능구에 대한 지정기준 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설정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구역 설정에 대한 기준 필요 ⇒ ex) 어장구(면허어업권 분포지역 외곽 50M 버퍼)에 대한 기준처럼 구체적인 기준 제시 마련

□ 최신 수치지형도와 연안육역선(지적선) 불일치 - 도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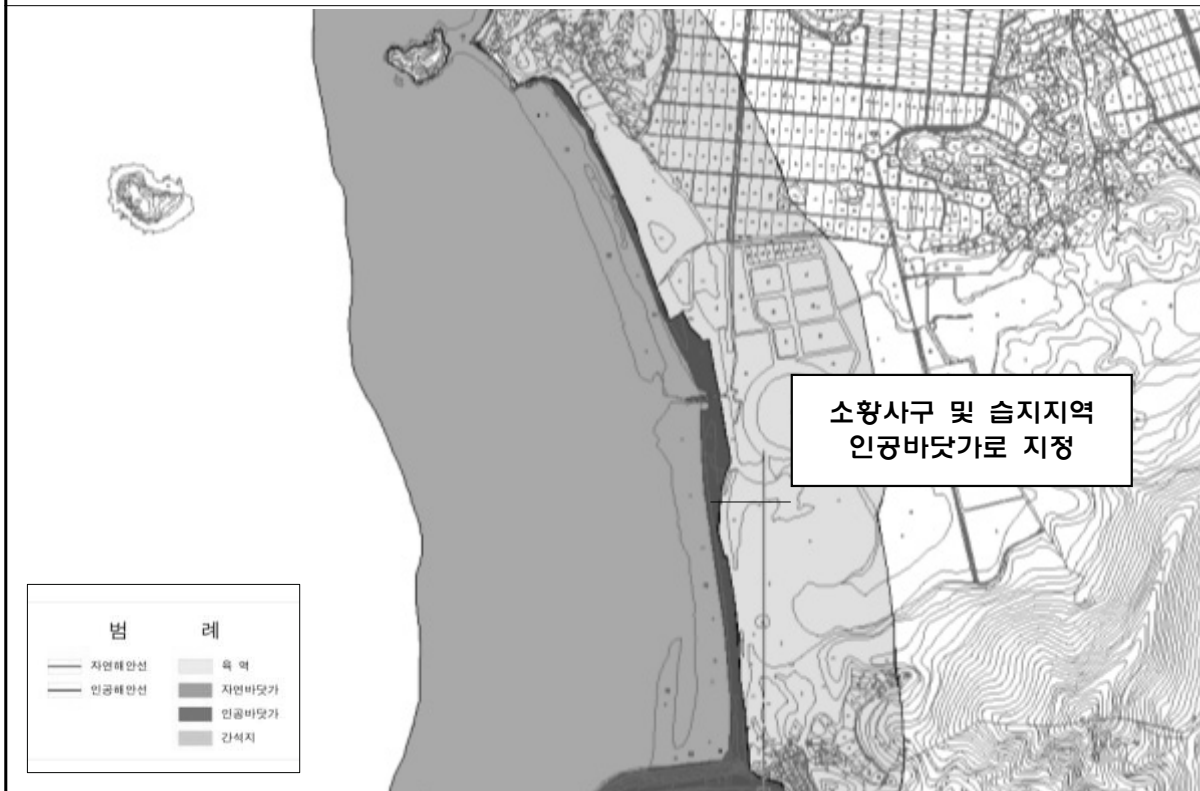
보령시 죽도 일원



질 의 내 용

- 연안육역선과 지적선은 일치
- 도서지역은 연안육역선(지적도)과 수치지형도 불일치로 작업시 기준 제시

보령시 소항사구 일원(장안해수욕장 2011년도 폐장)



보령 소항사구 현장사진



보령 소황사구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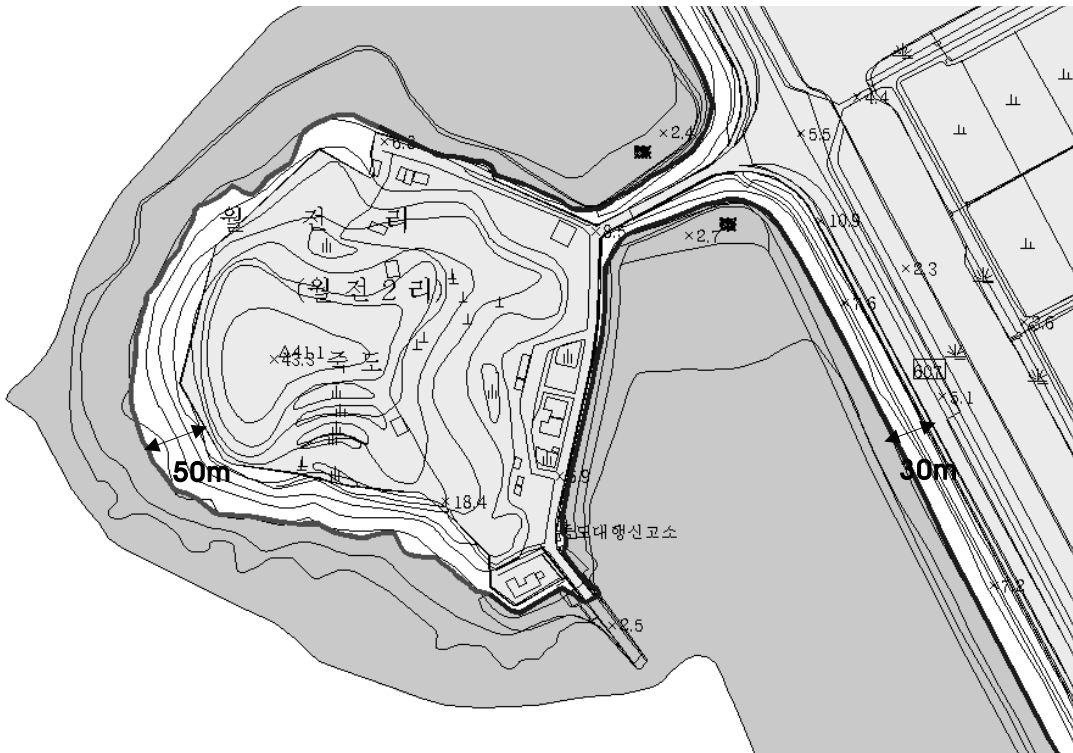


보령 소황사구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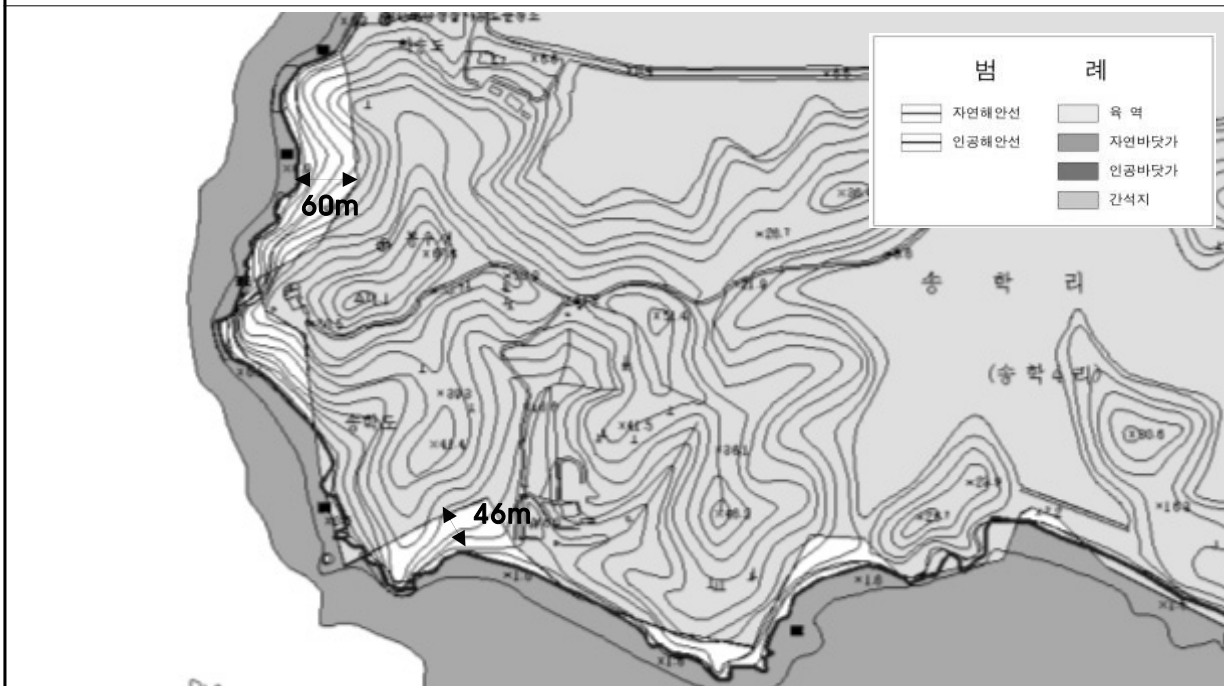


□ 연안육역선과 해안선 사이 빈 공간 처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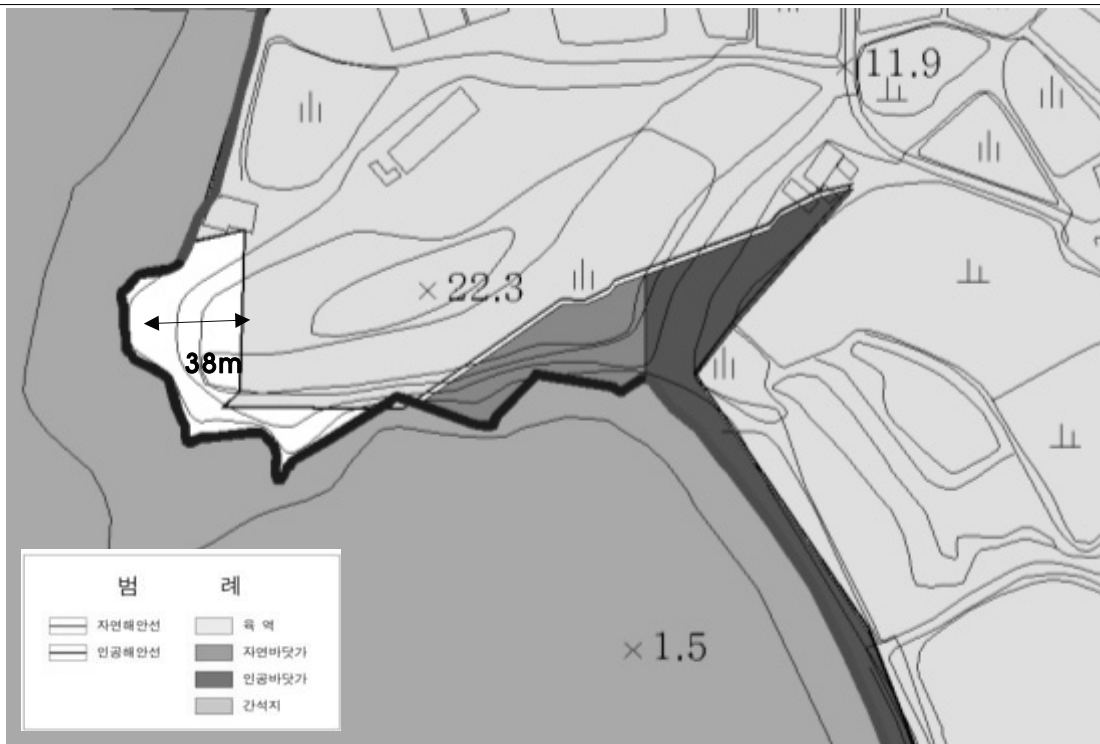
보령시 죽도 일원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일원





보령시 죽도 일원



질 의 내 용

- 연안육역선과 지적선은 일치
- 용어의 정의 상 연안육역선과 해안선(자연,인공해안선) 사이는 바닷가(자연, 인공)이어야 하나 현재 보령시 일부 바닷가를 제외하고는 연안전역이 빈 공간(평균 10~20m)으로 남아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질의 결과 빈 공간은 과업 수행 시 1/5,000 도상에서 1cm(실 거리 50m)는 오차로 보고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 그러나 본 과업에서는(4차 워크샵) 1m²까지 조사범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방안

□ 연안육역선과 바닷가선의 불일치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일원	보령시 오천면 고정리 일원
	
질 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육역선과 지적선은 일치 ○ 본 도면은 바닷가(자연,인공)선과 연안육역선의 불일치로 해안선(자연,인공) 및 바닷가(자연,인공) 선형이 좌표변환 결과 남동쪽으로 약 2m 정도 이동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충청남도 아산시

구 분	내 용
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국가(해양수산부) 또는 광역(도지사)에서 직접 수립(용역) 건의 - 아산시 연안은 「항만법」에 따라 연안전체가 항만구역 (평택·당진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평택·당진항만구역은 아산만으로서 2개도(충청남도, 경기도), 3개시(아산시, 당진시, 평택시)에 걸쳐있는 특수한 상황의 연안임. - 평택·당진항만 구역은 3개 시에 걸쳐 있으며,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구역(항만구)으로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인 국가계획에 따라 우리시 연안이 이용 및 개발되고 있어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필요성과 지자체 단독의 지역계획 수립 실효성 의문 - 따라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p>※ 제1차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용역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수립 함(2007.06.~2008.01.).</p>

■ 충청남도 태안군

구 분	내 용
질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치지형도와 KMI 및 해양수산부의 자료 수령 후 중첩해본 결과 자연해안선과 지적선 및 육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 중 어느 부분을 조사하여 용도를 부여해야하는지 -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도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용도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아크맵 상황과 캐드로 변환을 하였을 때의 도면이 상이한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도면 출력 및 작업을 해야 하는지

■ 전라북도 부안군

구 분	내 용
질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해상에는 지자체간 경계선이 없는 상태로 관할 해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 - 현재 새만금방조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3,4호 방조제는 대법원 계류중, 1,2호 방조제는 안전행정부 심의중) 방조제와 연접한 해상은 3개 시,군(우리 군,군산시,김제시)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중으로 각 시,군의 관할 해역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중복되는 해역에 대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보칙 제2항 “계획 공간이 중복되는 해역은 관리연안해역으로 본다”라는 내용에 따라 해역용도를 관리연안으로 지정 가능한지 ? -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경우 연안관리법상 연안해역에 포함되나 (만조시 해수가 유입되므로 용어의 정의상 바다에 해당됨) 연안관리통합계획에는 연안육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 연안 해역과 육역중 어디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 경상남도 거제시

구 분	내 용
수립상 문제점	-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자연해안관리 목표 지역별 추가 훼손 규모 미정으로 일부 계획안 수립지연.

■ 경상남도 고성군

구 분	내 용
수립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는 인근 연안 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능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기능구 및 지정 의제가 없음. - 연안관리법 및 지역계획 수립지침 변경이 예상되나, 향후 변경될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용역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용역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도면에 관리연안 기능구를 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나, 이와 관련된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외에도 연안관리법의 개정내용과 그에 따른 수립 지침의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없음.
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기능구 및 지정의제 설정 필요 - 현 연안관리법 및 지역계획수립 지침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점을 지자체 실무자 및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워크숍 등 협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 경상남도 남해군

구 분	내 용
수립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 연안통합관리 기본계획 작성 매뉴얼의 잦은 변경(계획)으로 용역 추진 애로 - 기간 내 사업완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기간 연장
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팀과의 긴밀한 협의로 통한 조기 용역 마무리 - 용역기간 연장으로 내실있는 용역 추진 - 공청회 등을 통해 연안지역관리계획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적극 수렴

■ 경상남도 하동군

구 분	내 용
수립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의 육역범위와 하동군에서 보유중인 수치지형도 및 연속 지적도의 도면이 불일치하여 도면작성의 기준이 모호함 - 인근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시설물(산업단지, 여객터미널 등)의 기능구 및 지정의제의 미수립으로 인하여 계획수립이 모호함 - '기능구' 세분화에 따른 연안관리법 개정 예정으로 용역기간 연장 검토

■ 경상남도 사천시

구 분	내 용
수립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용도해역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의 계획 수립 시, 세부지침이 재차 변경되어 검토·수정을 반복하는 사례 발생. 또한, 연안관리법이 현재 개정 예정 중이며, 이에 따른 지침 미 시달로 용역 추진 애로 - 산업단지 등 일부 연안기반시설의 경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 기능구를 설정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기능구 또는 지정 의제 없음 - 어항구(이용연안), 어장구(보전연안) 등 비슷한 성격이거나 관련이 있는 기능구들이 다른 용도해역의 기능구 포함됨.
질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I에서 제공하는 연안의 육역범위를 기준으로 설정시, 지자체에서 보유중인 수치지형도 및 연속지적도와 많은 부분이 상이한 바, 도면작성 기준 제시 필요? - 기능구 지정에 관해 패류생산지정해역의 경우 지정 의제가 모호하여, 계획수립자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어장구, ‘해양환경복원구’ 등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지정의제가 결정되지 않은 기능구의 지정방법 제시? ※ 현 시점에서 도서의 해안에 개발 및 복원 사업 시행 시 해안선 및 자연해안규모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용역 발주 이후에 관련법 및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대응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또한, 각 지역과 해수부의 연결고리가 되는 TF팀을 더욱 활성화·전문화 하여 지역계획 수립 애로사항 및 질의사항에 대한 해결책이 즉각적으로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 경상남도 창원시

구 분	내 용
수립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도면에 관리연안해역에 기능구를 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나(4차 워크숍), 이와 관련된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외에도 연안 관리법이 개정 예정이나 그에 따른 개정내용 및 수립 지침의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없음. - 창원시에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수정일반산업단지’, ‘진해국가산업단지’ 등 연안으로부터 1km 범위 내에 총 9개의 산업 단지가 구성되어 있음. 산업단지의 경우 인근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기능구 및 지정의제가 없음.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 시 필요한 해안선에 대하여, 미 조사된 지역을 제외하고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서지역을 제외한 부분으로만 산출할 경우 지역목표 설정 시 할당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게 산출될 것으로 예상됨. - 창원시는 예산이 명시 이월되어 2014. 02. 28까지 준공 후 예산지출이 되어야 하나 법령 및 지침미비로 인하여 용역준공에 어려움이 있음.
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연안관리계획수립 기준시점 마련 -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용역기간연기 및 중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중앙부처(해수부, KMI)에서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연안관리법 개정 및 세부지침변경이 필요하다면 5차 워크숍을 기준시점으로 해서 용역을 완료하여 보고하고 추후 『연안관리법』 개정에 대하여는 변경용역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분	내 용
수립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영시에는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정일반산업단지’, ‘덕포일반산업단지’ 등 연안으로부터 1km 범위 내에 총 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산업단지의 경우 인근 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기능구 및 지정의제가 없어 용도해역/기능구 지정이 불가함. - 또한 어항구(이용연안), 어장구(보전연안) 등 비슷한 성격이거나 관련이 있는 기능구들이 다른 용도해역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어, 해역 관리방안의 연계성이 떨어짐. - 통영시에는 패류생산지정해역이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패류생산지정해역의 지정의제가 없기 때문에, 계획수립자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해양환경복원구’ 또는 ‘수산생물자원보호구’ 등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자연해안관리도 지침의 미확정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불가피(지침확정시 용역기간 연장 계획) - 국립해양 조사원의 해안선 조사측량이 미 수립되어 통영시 도서지역의 해안선 및 자연해안규모 현황을 반영하지 못함 (연안관리지역계획 업무처리 규정에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조사 측량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제4차 연안통합관리 워크숍(국토해양부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03. 22)에 따르면,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도면에 ‘관리연안해역 기능구를 표기하는 것’ 등 연안관리법이 수정·보완될 예정이나, 현재 변경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음.

■ 경상남도 통영시(계속)

구 분	내 용
<p>질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관련 근거도면은 3개로 연안육역범위도,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가 있으나 3개가 상이한 바에 대한 도면작성 시 기준이 되는 도면은 ? - 해역은 육지부처럼 고시된 경계가 없어 임의대로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시 인근 지자체와 해상경계부분에 대한 마찰이 예상되고 지자체 해역경계부분에 대한 용도해역과 기능구 설정이 동일한 여건인데도 지정의제가 상이할 수 있음. - 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대책? - 연안용도해역(이용,특수,보전,관리) 도면표시 중 관리연안해역 경우 연안해역 기능구를 설정해야 하나 둘 이상 기능구에 해당되어 용도구분이 곤란한 해역의 경우 우선순위에 의하여 기능구를 설정하면 되는 지 여부 - 예시 : 어항구와 해수욕장구 중 우선순위가 어항구일 경우 어항구로 표시하면 되는지 여부? - 인근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시설물(산업단지, 여객터미널 등)은 기능구 및 지정의제가 없음 계획수립이 모호함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기능구 지정계획이 있는지 지정시 기능구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산업단지 :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중 해당 기능구는 여객터미널 : 레저관광구, 항만구, 어항구, 항로구 중 해당 기능구는 아니면 또 다른 기능구 설정이 있는지 - 전국 지자체 계획 수립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p>건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미수립된 산업단지 등 대규모 시설에 관한 기능구 및 지정의제 설정 건의 - 전국 지자체 계획 수립시 동일사안에 대한 지정의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 경상남도 통영시(계속)

구 분	내 용
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개최 한 후 해양수산부에서 1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사업수행자 또는 용역업체에게 정보 공유 건의 (시범 지역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작성방법, 문제점, 대응방안 등) - 현재 미수립된 산업단지 등 대규모 시설에 관한 기능구 및 지정의제 설정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지자체 계획 수립시 동일사안에 대한 지정의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 워크숍 개최 한 후 해양수산부에서 1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사업수행자 또는 용역업체에게 정보 공유 건의 (시범 지역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작성방법, 문제점, 대응방안 등)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실시하는 해안선 조사가 2013년도 말 준 공예정으로서 자연해안 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해 조사결과 해안선 정보를 사업수행자 또는 용역업체에 정보 공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자연해안 관리 목표제 조속한 설정을 위함

